

농민단체,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반발

농민수당 성격...농업 공익가치 외면 '착퉁 기본소득제' 전락

전남도가 추진하는 농민수당 성격의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놓고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민수당이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기본소득제와 뒤섞여보면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다.

17일 전남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15일 무안군 남양신도시 도입도서관에서 '전남형 기본소득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용역을 맡아 기본소득제 적용 대상 선정, 소요 예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수행한 뒤 용역 결과를 오는 8월

말 제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말까지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 내년 1월부터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구직 중인 청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 등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의 선거 공약이다. 김 지사는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해 만 0세에서 6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각각 월 2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미취업 청년들과 저소득 농

어민 등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소득지원수당을 포괄하는 통합적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전남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농민수당을 전남형 기본소득제에 껴 맞추다 보니 농민수당의 정체성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농민단체가 요구한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제안했는데, 전남도는 '전남형 기본소득제'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중심이 된 '착퉁

기본소득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제는 재산 등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 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남형 기본소득제는 저소득층 등 대상을 선별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농민이 직불금 외 수당까지 받는 것은 중복 수혜라며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해남군 등이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 발전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전남도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 오는 29일 농민단체·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거주 베트남 국적 외국인 5000명 육박

우즈벱 외국인 2400명 넘어 이주민 인권 생활수첩 제작

광주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수가 5000명에 육박하고, 우즈벱키스탄 국적 외국인 역시 2400명을 넘어섰다.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2만 2815명을 위해 광주시가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우즈벱키스탄어 등 5개 언어로 '이주민 인권 생활수첩'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주민 인권 생활수첩'은 국내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생활안내서로, 2017년부터 인권단체 협력사업으로 제작중이다.

광주에는 베트남 4948명, 우즈벱키스탄 2443명, 캄보디아 1144명, 스리랑카 414명 등이 살고 있다. 2018년 1차로 영어, 베트남어 이주민 인권생활수첩을 우선 제작·배포해 지역 이주민과 이주민 지원단체의 호응을 받았다. 이어 2차로 지난해 12월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우즈벱키스탄어를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

이주민 인권 생활수첩은 ▲이주민과 인권 ▲이주민과 생활 ▲이주민과 안전 ▲이주민과 건강 ▲이주민 지원기관과 다문화 지원기관 소개 등 총 5장으로 구성됐다.

이주민 인권 생활수첩은 이주민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민주인권포털(www.gjhr.go.kr)에도 게재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백서' 발간

16년 논쟁의 마침표를 찍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공론화 백서'가 발간됐다.

'소통 & 경청'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백서는 공론화 추진배경부터 공론화위원회 구성 전·후를 비롯해 시민참여단 구성과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진행내용, 최종 권고안과 평가까지 모두 망라해 기록했다. 공론화가 제기된 지난해 7월 중순부터 공론화 최종 결과 발표 날인 11월 12일까지 공론화 활동이 빠짐없이 담겨 있다.

'기록은 미래다'는 부제가 붙은 공론화 백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담겼다. 공론화 추진을 위한 7차례 준비위원회를 비롯해 9차례 공론화위원회, 3차례 소통협의회에서 논의된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수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총기 난사 49명 사망...슬픔에 잠긴 뉴질랜드 뉴질랜드 총격터에 희생자 추모객들이 16일(현지시간) 크라이스트처치의 마시드 알 누르 이슬람사원(모스크) 인근에 설치된 추모소에서 헌화하며 슬픔에 젖어 있다. 전날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의 마시드 알 누르 모스크 등 이슬람사원 2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49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광주 시민회관, 청년 창업·문화공간 거듭난다

시민추진협, 시민회관 50년 역사 살려내기 의견 수렴 착수

1971년부터 30년간 광주 최초 복합문화 시설로 각광을 받았던 광주공민 시민회관이 청년 창업과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민간 협의회인 '광주시민회관 활용 시민추진협의회'가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민추진협의회는 시민회관의 50년 역사성과 시민공간의 중요성을 담기 위해 전문가, 시민사회, 의회, 언론 등이 참여해

활용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시민회관은 1971년 개관해 2000년대 결혼식, 영화관, 공연장 등 시민 공간으로 이용됐다. 2000년대 들어 시설 노후, 이용객 급감 등으로 방치됐다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9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한 바 있으나 과거의 '영광'은 재현하지 못했다.

시는 2011년 당시 설계공모를 통해 시민회관을 다양한 세대가 찾는 상징적이고 예술성과 창의성을 두루 갖춘 명품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청소년 문화광장인

야외공연장과 실내소극장, 전시실, 카페 등을 설치한 바 있다. 시민회관을 국립아시아

문화재단의 문화창조 기능을 수용하고, 사회적경제문화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할 예정이었다.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공유재산인 시민회관을 청년 창업과 문화 활동공간으로 지원해 청년일 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도심공간으로 탈바꿈 위한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활용도가 낮은 소수 공간을 청년의 창의성과 활력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추진협의회와 별

도로 공간·브랜드 기획자, 공연·전시 창작자, 음식·공예 창업자 등 실행 주체가 참여하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광주시민회관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5월에는 '혁신 캠프'를 개최해 시민회관 야외 공연장을 핵심 시설로 해서 펼쳐질 활동과 콘텐츠를 모아낼 계획이다. 혁신 캠프에서 선정된 콘텐츠는 6월 한달 동안 멘토링과 개발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김준영 시 자치행정국장은 "민간이 창의적으로 공공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광주 시민회관이 지역 청년들의 힘으로 활력을 찾아 다시 시민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개별·공동주택 산정 가격' 의견 접수

15일~다음달 4일까지

광주시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19년 개별·공동주택 산정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다. 광주시 내 개별주택 8만3136호, 공동주택 42만3324호가 대상이다.

2019년도 광주광역시외의 개별주택가격은 9.5%(전년대비 3.88%상승), 공동주택가격은 9.77%(전년대비 6.83%상

승)의 변동률을 보였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으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상승세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구청장, 공동주택가격은 국토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이다. 공시된 주택 가격은 세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접수된 의견은 주택 특성과 적정 가격을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후 4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 치과 업체, 외국 기업과 2300만달러 수출 계약

19개 기업 '獨 치과전시회' 참가

독일 쾰른에서 열린 '2019 국제치과전시회(IDS)'에 참가한 지역 기업들이 중국, 이탈리아 등 외국 기업과 총 23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국제치과전시회에서 (주)KJ메디텍이 중국 Chongqing사와 3년간 750만 달러, (주)디맥스는 이탈리아 Dentalloys사와 5년간 400만 달러, (주)알파덴트는 스페인 Dentstal사와 5년간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하이덴탈코리아, 마이테크코리아, 휴덴스, 이센코리아, 티비엠, 덴바이오, 아이다코리아 사 등이 각각 100만~3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했다.

'독일 쾰른 국제치과전시회(IDS)'는 60개국 2300여 개사가 참가하며 156개국 15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 최대 규모 치과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는 (주)휴덴스 등 지역 19개 치과 관련 기업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광주 공동관'으로 참가해 세계 치과산업에 이끔 혁신기술과 관련 제품을 선보이며 광주 치과산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치과생체흡수성소재부품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참가기업의 부스비 등을 지원하고 전남대, 조선대, (사)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광주테크노파크 등이 함께 참여해 공동관 운영, 바이어 상담회, 수출계약 등을 추진했다.

(주)휴덴스 노화 대표는 "이번 전시회에 한국 기업의 참가규모는 세계 두 번째로,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 치과 업계의 위상이 높다"며 "그 중에서도 광주 기업은 탄탄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